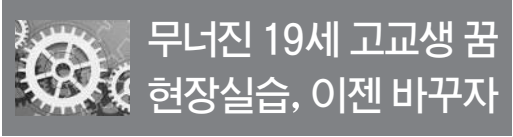


실습 빙자한 노동 안돼...학습권·안전 보장 대책 절실



<하> 안전 실습 위한 개선 방안은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학교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운(18)군 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대한 각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고 때마다 정부 당국이 대책을 내놓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비슷한 사고가 터지는 '사고-제도 강화-제도 완화-사고'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실습생이 공부하는 학생 노동자가 아닌, 값싼 착취 노동자'라는 현장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내놓는 오락가락, 임시방편식 대책은 미성년 현장실습생의 또다른 희생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으로 이뤄지는데도 노동행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 국가직무능력 교육과정 부실 운영 방식...비극의 악순환 되풀이 실습업체 발굴 등 전담기관에 맡기고 기말고사 이후 취업활동 나서야 안전 소홀 업체 엄벌하고 전국 직업계고 동시 취업기간 설정도 필요

공통된 현장 목소리다.

최근 여수에서 열린 '직업계고의 학교교육정상화와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안' 토론회도 현장에 있는 학생·학부모·교사·교육 전문가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규학 전남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은 직업계고가 교육기관인지, 훈련기관인지, 현장실습이 교육인지 노동인지 오락가락했던 역대 정부의 갈팡질팡했던 직업계고 정책을 꼬집었다.

교육기관이 아닌, 직업훈련기관으로 취급하면서 현장실습도 교육 목적의 학습보다 저임금 노동력 제공방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채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게 이 감사관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 모듈을 통한 교육 과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고도 현장실습으로 NCS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감사관은 전국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동시 취업기간'을 설정, 이 때문에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 학교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부가 직속으로 '고졸 취업 지원 센터'를 마련, 전국 취업 희망 업체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정훈 진성여고 교사는 현장실습 업체 발굴, 취업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기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습생 안전을 최우선하는 양질의 실습처를 발굴, 학교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적 우수 학생 위주로 이뤄지는 취업 교육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현장실습 전담 전문 취업 지도사 배치도 시급하다는 게 이 교사 지적이다. 이 교사도 "특

성하고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기말 고사 이후로 모든 취업 관련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이만호군 아버지로 노동 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영씨는 "3학년 2학기 10월부터 현장에 나간 학생의 경우 졸업 후 채용까지 약 5개월 간 학습을 빙자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취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에 대한 노동 교육도 필요하다.

여수해양학교 고3생현군은 "취업을 하기 전 현장에 대해 알고 직접 경험해보는 일은 소중한 기회"라며 "어려운 것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 된 실습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업체 선정 뿐 아니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조치가 부실한 현장에서 일하다 스러져간 현장실습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 현장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게 학습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故) 홍정운 군 친구들은 지난 24일 홍군의 49재를 맞아 '밤하늘의 별' 등의 추모곡 2곡을 발표 했다.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한니까. 많고많은 친구중에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정말."

친구들은 이같은 노래말을 담은 추모곡을 온라인과 SNS, 유튜브에 올리고 특색있고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원하고 있다. 추모곡 발표에 참여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제작과정도 동영상으로 제작, 선보였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관계자는 "홍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보 유출' 수사, 법조계 비리로 확대

'몰래 변론 의혹' 변호사 2명 영장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조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전·현직 경찰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브로커, 변호사 사무장, 변호사까지 넘어가는 등 광주지역 법조계 비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청구된 광주지역 A 변호사와 대전 지역 B 변호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중인 점을 들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9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광주

경찰청 C경위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C 경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이들 변호사들 혐의가 드러났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의 선의적이지 않은 '몰래 변론' 활동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공무상비밀누설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C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탁 대가 명목으로 전직 경찰인 D 경위의 역대 굵품 수수 행위를 적발, D 경위를 구속한 바 있다. 여기에 전남청 소속 E 경위의 앞선 수재 혐의도 포착해 기소했고 고교 선배인 전 변호사 사무장 F씨도 재판에 넘겼다. C 경위에 대한 혐의가 추가되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정보 유출, 사건 알선·소개, 청탁 등 온갖 법조 비리 형태가 드러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 집중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가채점 결과분석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률 조언 해주고 돈 받아 현직 부장판사 벌금형 선고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부정 청탁 및 굵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판사에게 돈을 건넨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주는 등 법률 조언을 해주고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함께 사업을 하던 공동 운영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뒤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판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굵품을 수수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법원의 징적 6개월, 1000만원의 징계부가기능 등 처분을 받은 점 정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두환 항소심 재판 연기 공소 기각 절차 밟을 듯

전두환씨 사망으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던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미루는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사망에 따라 애초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하려던 계획을 변경, 공소기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일단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한편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도 전씨 사망을 이유로 12월 22일로 연기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내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한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광주지법, 추가변론 수용 안하고 선고 일정 못 박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합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 9월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하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내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8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이 회장을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열었다.

새로 선임된 이씨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대한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윤 판사는 "그동

안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다. 추가 변론은 첨부 자료로 제출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 크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는 변호인측 입장에 대해 "1년여 재판하면서 변호사가 세 번째 교체되며 업무상 횡령 부분을 열심히 다뤘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끝냈다. 판결도 다 써놓았다. 솔직히, 기회 제공 차원에서 변론을 재개한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

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넨다가 거절당하는 등 100만원이 넘는 굵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굵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업무상 횡령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 감정평가액 | 최저매각가격 | 비고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단위: 원] | |
| [아파트] | | | | | |
| 2021타경 14800 | 1 | 서구 용암순환로183, 107동 12층 1208호 [아파트] 59.955㎡ | 182,000,000 | 182,000,000 | 2021타경67474 [중복] |
| 2020타경 75232 | 1 | 북구 북문대로159번길39, 103동 1층 110호 [온양동, 일신아파트] 59.82㎡ [김홍중 1/2지분소유] | 49,500,000 | 49,500,000 |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1회로 제한 |
| 2021타경 4701 | 1 |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156, 101동 8층 809호 [화순청정아파트] 59.99㎡ | 97,000,000 | 97,000,000 | |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 | | | |
| 2021타경 3395 | 1 | 남구 대남대로308번길13, 3층 302호 [월신동, 광전파라] 54.2106㎡ | 99,000,000 | 99,000,000 | |
| [대지/임야/전답] | | | | | |
| 2021타경 3234 | 1 | 담양군 가사문학면 무동리 239 638㎡ [공유지] 차감다층3/7지분전부, 현할 전 1 | 4,648,310 | 4,648,310 |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 감정평가액 | 비고 |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 |
| [자동차, 중기] | | | | | |
| 2021타경 6516 | 1 | 사동본거지:나주시 간재로 360 [석현동] 원남명 등록번호:전남06014938 기종:엠프트릭 연식:2010 | 25,000,000 | 25,000,000 | 보관:전남장성군 동회면원남동길15-21, 兩한곡쓰리속 현대상용셔버스 |
| 2021타경 69166 | 1 | 사동본거지:광산구 신가병로47번길 8-64 [신가동] 등록번호:06라1638 차명:모닝 연식:2018 | 9,700,000 | 9,700,000 | 보관:광주광산구 용영정길65-15 |
| 2021타경 72445 | 1 | 사동본거지:동구 계림동 571-4번지, 302호 [신가동] 등록번호:06라1638 차명:모닝 연식:2020 최중소유자:노광홍 [50%], 노현지 [50%] | 21,000,000 | 21,000,000 | 보관:광주북구구 치로337-6, 글로벌 주차장 |

● 공표된 부동산의 변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특약지역을 제외하여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특약지역을 제외하여 아니므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지가 민사합병된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 때 매수신청금액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분양도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면제하여 준다.
 ③ 권익이 공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영주택지역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이다.
 ④ 임차보증금의 투입이 완료되면 공판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아닌 이상입찰 경우에는 그 입찰금만 원금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⑤ 최고가매수신청인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 증명되는 즉시 반환한다.
 ⑥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 때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 이후 확정된 대금지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함이다. 대금지급기한은 종상 매각결정일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함이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상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잔여지, 변통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에서 유예하며, 만일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④ 매각대금 납부후 종상 매수인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소멸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종상 매수인이 매수신청 후 종상 매수신청금액을 납부한 후 종상 매수신청금액을 납부하고, 국민은행계좌입금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이다.
 ⑥ 일반인등의 몰염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에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와 사본 등을 우리법원 인사팀(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⑦ 주의 사항
 ⑧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매각결정일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2주 전까지 법원신청일과 매각일과 거주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자 등 특정인만을 위한 입찰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⑨ 일반인등의 몰염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에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와 사본 등을 우리법원 인사팀(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⑩ 주의 사항
 ⑪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매각결정일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2주 전까지 법원신청일과 매각일과 거주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자 등 특정인만을 위한 입찰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⑫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의 매각일 때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이다.
 ⑬ 일반인등의 몰염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에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와 사본 등을 우리법원 인사팀(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⑭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공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⑮ 대한민국 법원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연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입찰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대금지급신청이나 은행명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과 공고된 매각결정일에서 등록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성관